"소비자 불안 자극하는 보험사 과장광고 통제 강화할 것"

취임 3주 이찬진 금감원장

업권별 CEO 릴레이 상견례
보험회사 간담회서 관행 정조준
"GA 불건전 영업, 경영진에 책임"
8일 증권·자산운용업계 간담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취임 3주 차에 접어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릴레이 상견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은행을 시작으로 보험, 저축은행, 증권·자산운용, 카드, 상호금융 순으로 업권을 차례로 만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기조를 업계 전반에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전임 이복현 원장이 취임 직후 적극적인 백브리핑과 현안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이 원장은 원고에 맞춘 모두발언과 비공개 대화 중심의 행보를 통해 감독 메시지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과도한 광고와 불완전판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같은 고질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과장 광고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광고 기획 단계부터 사전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고액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와 GA(법인보험대리점)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 "적발 시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선 "금리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업계 우려를 감안해 K-ICS(보험금지급여력) 기본자본 규제 도입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문제 등 일부 쟁점은 원칙에 맞게 정리하겠다는 태도로 남겨두며 신중함을 유지했다.

앞선 은행업권 CEO 간담회에서는 이미 '이자 장사' 지적을 통해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주문했고,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준비된 발언만 내놓는 듯 보였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예상보다 긴 시간을 들여 은행장들의 건의를 경청하며 위험가중치 규제나 자본규제 같은 세부 현안을 청취했다.

업권별 간담회가 이어질수록 준비된 메시지는 구체성을 더하고, 각 업권 현안과 맞물리며 감독 기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제 관심은 오는 8일 예정된 증권·자산운용업계 간담회로 쏠린다. 업계 최대 관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심사, 그리고 책무구조도 정착 여부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IMA 지정 심사를, 4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 손질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 원장이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책무구조도 역시 현 정부의 지배구조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점검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보험권에서와 같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결론보다는, 원칙과 방향을 먼저 각인시키고 세부 내용은 추후 후속 브리핑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원장이 모든 업권 간담회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조는 금융소비자 보호다. 은행권에선 '이자 장사'를 비판했고, 보험사에는 '과도한 광고'와 '판매 관행'을 정조준했다. 추후 업권별 간담회에서도 초반부터 강하게 경고를 주되, 구체적인 제재나 인허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하면 기관장 해임

구윤철 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경영 위해 기관장 책임 법제화"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기업·기타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은 직위해제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 산재사고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수 공시도 신설해 안전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서는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연내 점검·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 안전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운위 위원들은 이날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 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